

녹색지역사회 만들기와 녹색가게운동의 자리 매김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박 영 숙 (자유 환경인)

발제의 범위설정

21세기의 지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은 사회발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환경보전을 동시에 성취하는데서 가능해진다.

서울 YMCA가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실천운동으로서 <녹색가게운동>을 '97년 중점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최근의 우리나라의 역대 최악의 경제사정으로 보나 악화일로에 있는 환경사정으로 보아 선견지명이 뛰어난 결정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서울 YMCA는 '96년 3월 개점한 과천녹색가게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6월 <서울시의 주부생활용품, 재활용의식 및 형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녹색가게운영을 위한 지도자 훈련과정을 거쳐서 현재 서초구('97. 10. 27)와 은평구('97. 10. 29)에 녹색가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울 YMCA의 녹색가게 운영의 성공은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의 길잡이로서 오늘 우리가 처한 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생활대안문화로서의 녹색생활을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가게운동을 위해 서울 YMCA는 지금까지 여러 단체들이 일회성 행사로 또는 단편적인 활동으로 전개해오던 물품의 수명을 최장화하는 재사용운동을 상설기구로서 한 단계 높여놓음으로써 이 운동의 좋은 모델이 되었고 이 운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지게되었다.

이때에 서울 YMCA가 녹색가게운동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운동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신뢰감을 더해주며 밝은 전망을 갖게 하여주고있어 다행이다.

발제자는 앞서 있었던 7월 22일의 녹색가게운동 지도자훈련에서는 <외국의 녹색가게운동>에 대해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은평구 녹색가게운영을 위한 지도자 워크숍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녹색지역사회만들기와 녹색가게운동의 자리 매김>을 발제한 바 있다.

얼마 전 11월 11일에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최한 녹색소비자포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소비자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참고하면 운동의 중요성, 배경, 유형, 자리 매김, 녹색생활의 중요성, 지침, 전략 등에 대한 제시가 부분적이거나 되었다고 전제하고 이 정책협의회에서는 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놓고 그 동안에 보아온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운동의 경험은 일천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활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YMCA를 필두로 하는 모든 환경운동체와 소비자운동

체의 헌신적이고도 끈질긴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이 운동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 정책협의회의에서의 발제자의 문제제기도 깊은 연구의 뒷받침이 없는 개인의 피상적인 관찰에 의한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둔다.

풀어야 할 숙제들

① 녹색가게의 형태점검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의 녹색가게의 형태를 보면 중고품의 교환활동, 위탁판매, 알림판 활용매매 등으로 중고품 판매활동을 주로 하면서 일일알뜰시장, 어린이버룩시장 등의 이벤트를 운영하고있다. 개점한지 1년 반이 넘은 과천녹색가게의 경우 1일 평균 이용인원이 70~100명으로 월 1,500여 명이라고 한다. 이용자 수에도 관심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연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물품의 수명을 최장화하는 재사용운동으로서 녹색가게는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환경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보다 많은 이용자들을 유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가게의 운영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즉 중고품 교환 또는 중고품 구입 목적 외의 이용자들의 관심거리를 추가해야한다. 현재의 녹색가게(ECO SHOP)가 물품의 재사용 권장에서 한발자국 더 나가서 녹색소비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녹색생활의 길잡이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목적환경상점(ECO STORE)으로 변신해야 한다.

이 말은 건강을 관심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식품과 안전한 먹거리(유기농산물, 가공품, 환경 밀반찬)를, 환경상품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환경마크상품을,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의 임대사업, 환경정보의 제공장소로, 물건을 수선해서 쓰려는 사람들에게는 수선소(일본 복지관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용돈벌이가 되고 있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출발은 재사용운동인 중고품가게이지만 점차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활의 종합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발전시켜야한다.

다양한 내용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명소로 발돋움해야한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신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하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② 가격체계수립

중고품거래의 특징은 물품가격이 싸다는데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지금까지의 바자회 형식의 행사에서는 거의 거저 주다시피 해오고 있어 녹색가게운영에서의 가격책정문제에 한동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녹색가게의 경우 의류 값은 500원~3,000원이며 고가품인 경우에도 5,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다량 생산되고 덤핑가격으로 상품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한편 중고품사용풍토가 아직 일반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녹색가게운동이 하나의 환경친화적인 생활대안문화로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구전을 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의 합리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윤추구는 아니지만 속된 말로 장사가 되어야한다.

물건값이 너무 싸니까 서로 사려는 사람들로 물건이 동이 나게 생겨서 그것을 막기 위해 교환품을 자져오는 사람에 한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다고 한다. 제한적인 판매요건 제시가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적정가로서 일반 상거래처럼 거래가 이루어져야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격지침-PRICE GUIDE>이 해마다 개정 편집되어 출판되고 있어 녹색가게운동의 가격책정을 돕고있을 정도이다.

싼값으로 내놓기 아까운 고가품에 대한 위탁판매의 수수료원칙도 만들어져야한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에 할애하는 계획을 가지고있는 한 녹색가게가 이윤을 추구하는 상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된다.

③지속적인 운영인력 확보

녹색가게운동의 성공의 열쇠는 가게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녹색가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게 처음 참여 당시의 열의와 보람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가게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점차 전문성과 체계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에 따른 인력은 자원봉사자들의 여가활동으로 충당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그러다 보면 운영인력이 유급자와 무급자로 분리되면서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해소는 유급자와 무급자에게 각기 다른 책임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 방안(봉사시간 기록제, 녹색주민 인증제, 봉사실비 보상제 등)이 모색되어야한다.

④공간확보

녹색가게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도 사람들이 붐비는, 목이 좋은 곳이라야 한다. 레저시설이 있는 시민회관에 위치한 과천녹색가게, 서초구민체육센터 지하1층의 서초녹색가게, 그리고 녹번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자리한 은평녹색가게 등은 일단 만족할만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인다.

외국의 녹색가게들을 보면 의류매장의 경우 판매장은 넓지 않으나 계절별의 의상을 보관하거나 옷을 깨끗하게 손질할 수 있는 공간을 매장의 지하 또는 별개의 공간을 마련하고있었다. 이들 공간은 자치체의 공공기관 또는 자선단체의 후원으로 제공되어있는 것이 보통이다. 녹색가게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이다. 중고품가게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옥스팜의 경우도 50년에 가까운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한 공간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간섭은 받지 않는 순수 민간기구이다.

녹색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가게운동은 그 기능의 특징상 지역사회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한다. 서울시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실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녹색생활을 위한 거점으로 동사무소를 선호하고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바람직한 전망으로는 동 단위의 녹색가게의 설치이다. 행정의 선진화에 발맞추어 동사무소의 기능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미 문화센터 또는 복지센터로서의 면모로 전환된 동회들도 늘어나고 있다.

YMCA가 앞으로 동 단위의 녹색가게설치를 목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다면 불가피하게 녹색가게운동을 쾌적한 내 고장 만들기 계획인 <지방의제 21>과 연계하여 이 운동을 전개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한다.

⑤<지방의제 21>과의 연계

<지방의제 21>은 세계의 도시들이 자기고장을 쾌적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21세기의 행동계획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64개국의 1812개 도시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여러 광역자치체와 안산 등의 중소도시와 서대문, 용산 등의 기초자치체들이 이미 계획을 완성하였으며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자치체들도 다수 있다.

<서울의제 21>은 8개 분야(물, 대기, 폐기물, 생태, 교통, 도시계획, 문화, 복지 등)의 30개의 개선목표와 365개의 행동계획으로 작성되어있다. 이들 행동계획이 녹색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95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되고있는 지방자치제가 시민자치제로서 자치체들은 <시정은 시민과 함께>라는 기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한 시행정의 방향설정에 걸맞게 시민단체들도 시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지방의제 21>은 필히 지역사회구성원간의 협력으로 수립하며 실천해나가야 하는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역정부의 동반자(PARTNER)관계수립을 필요로 하고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내 고장을 녹색지역으로 만드는 <지방의제 21>의 실천모델의 하나로 그리고 실천운동의 거점으로서 녹색가게가 설치되고 운영된다고 할 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⑥지방자치체와의 협력

앞서 지적한 5개항의 풀어야할 숙제들을 검토해볼 때 녹색가게운동이 크게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녹색가게운동이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선도하는 것으로 녹색지역사회만들기에 기여해야한다. 지방자치체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는 녹색가게운동이 지역환경행정의 일환으로 인식될 때 이루어지며 환경행정의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때 지속될 수 있다.

녹색가게운동을 지역사회의 하나의 생활문화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동 단위의 녹색가게설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다.

- 공간제공(동사무소, 구민회관, 체육관, 복지관, 청사구내시설, 이벤트를 위한 앞마당 등)

- 전문성과 체계성을 요구하는 녹색가게운영의 전담책임인력공급 가능. 단 이때의 인선은 녹색가게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 지속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공
- 쾌적한 내 고장 만들기 계획의 실천거점으로 녹색가게 지원
- 지방정부의 사회진흥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또는 시민국이 재정 및 행정 지원(지도력 양성, 홍보활동 등)을 하도록 한다.
-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제도는 자치구의 환경기본조례에 포함시키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별도 조례로서 마련한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체의 지원을 얻어내는 일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행정부간의 가교역할은 YMCA가 담당한다. 그러면서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YMCA의 묶은 지역주민이 지원에 부합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일이다.

-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녹색가게를 운영한다.
- 녹색가게 운영을 지역사회 환경행정의 일환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조정한다.
-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 지방정부의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을 자치구 의회와 협력하여 성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간의 협력관계 수립이 용이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비록 민선지방자치=시민자치(환경자치)의 기치는 드높지만 지금까지의 관 주도의 행정관행과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기만을 기대하는 시민의 인식 그리고 시민단체는 그들이 감시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행정부와 협력의 끈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정부와의 협력관계 수립이다. 협력관계는 동반자(Partnership)적인 대등협력적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민단체는 이러한 비민주성을 탈피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도 힘써야한다고 생각한다. 녹색가게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효시인 YMCA가 녹색지역사회만들기라는 지역환경행정에 지역주민참여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민자치, 환경자치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기대한다.

⑦조직 및 운영

운동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하는 많은 주부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때 이 운동은 성공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 실천에는 불편이 따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추가부담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혼자하기보다는 4~5명이 팀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실천하는 것이 지속성을 유지하게 한다.

녹색가게운동의 저변을 녹색주부들의 팀으로 형성해야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과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에코가족운동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실천행위가 따라주어야 하는 운동이 팀활동에 의해 성공한 사례는 여러 경우가 있다.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의 발상지인 유럽에서 이 운동이 침체현상을 맞고있을 때 일본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치달고있었다. 그 성공의 열쇠가 바로 운영의 중심에 <반조직>이라는 5~10인으로 구성된 팀이 있어서였다고 한다. 협동조합의 기본은 조합원에 의한 출자, 이용 그리고 운영의 3위1체에 있다. 즉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일본의 생협운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서울 YMCA가 현재 전개하고있는 녹색가게운동도 생협의 3위1체의 기본원칙에 준한다고 본다. 출자(출품), 이용(구매) 그리고 운영(자원봉사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협의 원동력이 되는 반조직의 기능을 녹색가게운동에서는 에코가족운동과 연계해서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많은 실천운동조직과의 연계도 제안한다.

맺는말

며칠 전 언론매체에 의하면 중앙정부 청사에서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일일 벼룩장터가 열렸다고 한다. 23일 아침 텔레비전에 출연한 신임 경제부총리는 국민소득 1만 불에 불과한 우리나라 국민의 일부에서 2~3만 불 생활수준을 쫓고 있어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근검절약으로 위기에 처한 경제국면을 극복하자고 호소하는 것을 들었다. 시민단체들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방안으로 가두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10대기업에 속하는 기업도 부도 처리되거나 위기에 몰려있다는 상황에서도 수입사치품을 취급하는 갤러리아 백화점('97. 8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의류 및 모피, 잡화류는 10억 5,500만 달러이며 화장품은 2억 4,800만 달러라고 한다)이 폐점위기에 있다는 말은 들리지 않으며 얼마 전 특급호텔에서 초호화판 세계 명품, 보석대전이 열렸는데 6억 7000만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5000만원대의 피아제 시계 등이 즉석에서 팔려나갔다고 하는 물지각한 분위기가 한편에 자리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서울 YMCA의 녹색가게운동은 지구환경을 살리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맑은 물줄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나섰다. 흙탕물에 한줄기 샘물줄기와도 같은 움직임이다. *조용한 기대를
우리 품에.*